

한동훈·국민의힘 중진 간담회

“대통령 담화, 변화·쇄신 계기되길”

친한계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 한동훈 대표 제안 담화에 담겨야”
친윤계 “공개적 요구에 담화 퇴색 김 여사, 공적으로 해야 할 책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은 기대 섞인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명대군 녹취록 파문 등을 결자해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 집권 후반기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급히 마련한 회견이 ‘안하니만 못했다’라는 평을 받게 되면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 저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다. 그 정도는 저는 담화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 인적 교체 및 쇄신 내각 구성,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여부에 대해 “한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지금의 민심을 담아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봐오면 해야 할 일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있을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오셨지 않나. 아마 이번 대국민 담화와 회견을 통해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도 “바둑을 둘 때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자신의 말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야 한다는 뜻)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당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공개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대국민 담화 같은 같은 것이 퇴색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해서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 관례와 외교적으로 볼 때 당연히 참가해야 할 일

들이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빠지고 제한된다면 나라의 격이 무엇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6선 중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경태 의원(6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윤상현·조배숙(5선)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표와 중진의원들은 “내일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향후 이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내일 담화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당정일체의 힘을 모아 다시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한 대표에게) 말씀 드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1兆 규모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2027년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며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각 시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데 이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6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6개 시도는 기업들과 총 33조 8000억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 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이수와 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거쳐 지난 9월 법무부가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선진화 정책 등으로 주식시장 정상·활성화 총력”

韓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이사 총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개혁 추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사 총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시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았다. 입법 추진 관련 상임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기획개정위원회 김영환,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운, 박균택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석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의원도 TF 위원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추후 위원이 추가로 합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법안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당론 법안을 성안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를 외면한 채 물적분할, 백도어 상장(우회상장), 합병 등을 통해서 소수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소주인에게 왜 송아지를 따로 떼어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지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굴이 회수를 넘으면 탕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반성과 모색

속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그 모태가 일본에서 추진한 것인데, 일본의 정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기업의 이익이 밖으로 넘어가 특정한 사람에게 누수되는 것을 막고 책임을 추궁하는 지배구조 개혁이었다”며 “다른 하나는 관행의 개혁이었다.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의 축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지만 최근 내용이 다 삭제됐다. 결국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세금 감면하겠다는 것 밖에 없다”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현해탄을 넘으면 서 탕자가 됐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지배주주가 굵깁 빼먹듯이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시스템은 이런 행태를 규율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TF는 이사의 총실 의무를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오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특정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당론 법안은 정책위랑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했다면 거래세는 복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증권거래세 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기재위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파병 북한군-우크라이나 교전설 부인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전장 모니터링 파견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러시아로 파병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을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사항”이라면 “하지만 (모니터링팀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수행에 의거하여 국방부 장관

의 정책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선 모니터링팀에 대해서는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했다”며 “우크라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전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확정해오면 그때 공식적으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 첫 교전이 있었다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을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북군과 우크라이나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